



표 찍기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 정치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4~5면

우크라이나
전쟁

2, 3, 8, 9면

‘이대남’과
페미니즘 논쟁

10~11면

인플레이션의
원인

12~13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가
치료비 폭탄 현실을 말한다

16면



전쟁을 중단하라

서방과 한국 정부의 러시아 제재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관련 기사 2, 3, 8, 9면

3월 6일 국제 행동의 날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서방과 한국 정부의 러시아 제재 반대!

3월 6일(일) 오후 2시 | 장소: 서울 보신각 앞 (집회 후 행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쟁점들

김준호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우크라이나 국가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혀야 한다고 보고 전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쳤으며, 수십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푸틴은 동유럽 지배권 쟁탈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위를 높이고 있다.

2월 27일에 푸틴이 '핵 전력' 부대에 투입 대기 명령을 내린 것이 그것이다. 이는 서방의 제재에 맞대응한 것이기도 하다.

서방과 한국 정부의 러시아 제재, 왜 문제인가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한다. 한국 정부나 주류 언론들도 러시아를 주되게 규탄한다. 하지만 서방이 나토의 동진을 추진해 온 것이 이 전쟁의 중요한 발단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른 한편, 이번 전쟁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에게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이어 임기 중 두 번째로 맞은 지정학적 굴욕이다. 러시아의 침공이 성과를 거두면, 미국의 위상은 추락하고 핵심 전선인 대중(對中) 압박에도 차질을 빚을 터다.

그래서 미국은 대(對)러시아 압박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다시 갈등 고조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제재가 있다. '숨방망이 제재'라는 평이 많지만, 실상은 사뭇 다르다.

미국은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자국의 지배력을 이용해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SWIFT)에서 밀어냈다. 이로서 러시아의 무역에 적신호가 켜졌고, 루블화 가치가 폭락했다.

그런데 제재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것은 러시아 지배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러시아 사람들이다. 루블화 폭락으로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심각한 생활고에 직면했다. 러시아산 밀 수입에 의존하는 이집트 같은 나라들에서도 식료품 가격이 폭등했다.

게다가 제재는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미국의 '금융 핵무기' 투하에 푸틴은 실제 핵무기 카드를 내비치는 것으로 대응했다. 문재인 정부의 러시아 제재 동참이 문제인 까닭이다.

서방은 '총성 없는' 전쟁 중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도 하고 있다. 2월 26일 미국 국무장

관 블링컨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무기·물자·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도 무기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유럽연합과 그 핵심인 독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지원들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 때도 미국은 당시 열세였던 이스라엘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해 (중동을 피바다로 만들며) 전세를 뒤집은 바 있다.

서방 강대국들의 동유럽 추가 파병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영국 등은 동유럽에 군대를 증파했다. 2월 25일에 나토는 동유럽에 신속기동군 4만 명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2003년 창군(創軍) 이래 최초의 일이다.

이런 긴장 고조 기류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으로 이어졌다. 첫째,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부결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실현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이런 행보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충돌을 격화시킨다는 것은 분명하다.

둘째, 시민당이 이끄는 독일 정부가 독일의 군비 투자를 GDP의 2퍼센트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핵심이지만 이전까지는 군사력 증강이 제약돼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 견제를 명분으로 굴레를 벗겠다는 것이다.(아시아에서 일본이 중국 견제를 이유로 재무장에 나서는 것과 비슷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유럽연합 제국주의를 더 공격적으로 바꿀 변화이며, 나토 역시 강화할 일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승리를 바라야 하나?

본지가 지적했듯, 푸틴의 침공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제국주의 침공이므로 반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이에 저항할(무장 저항 포함) 권리가 있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그런 저항이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벌이는 항전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군사적 승리가 평범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진보일까?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일관되게 친서방 기조를 추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앞

세워 러시아계뿐 아니라 헝가리계·유대계·타타르계 등 소수민족들도 억압했고 극우를 군경에 끌어들이었다(관련 기사). 현 대통령 젤렌스키는 전임 우익 정부에 대한 불만에 힘입어 당선됐지만, 집권 후에는 전임 정부의 기조를 적극 수용했다.

따라서 젤렌스키 정부는 강대국에 뺨박박는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라, 제국주의 갈등에서 한쪽을 편들면서 긴장을 고조시킨 (강대국보다는 부차적이지만) 작은 일부다. 이 정부가 푸틴에 군사적으로 승리하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평범

한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억압·공격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친서방 정부의 승리는 미국·서방 제국주의의 자신감을 키워, 우크라이나와 동유럽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정세도 더 긴장케 할 것이라는 점이다.(아래를 보시오.)

강대국들 간 쟁탈전에서 어느 쪽의 승리도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진보일 수 없다는 것이 현 상황의 비극이다. 그럼에도 그 제국주의 세력들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으면 진정한 대안을 건설할 수 없을 것이다.

평화 협상이 체결되면 될까?

러시아 침공의 참상 때문에 즉각 평화 협상을 체결하라는 요구가 광범하다. 당사국들이 즉각 교전을 멈춰야 한다는 요구는 완전히 옳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전쟁이 평화 협정이 없어서 벌어진 게 아님도 봐야 한다. 2014년 체결된 민스크 협정은 당사국의 군사 행동을 금지하지만, 이제 휴지조각이 돼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푸틴의 전쟁에 용기 있게 맞서는 러시아 국내의 반전 시위는 친서방 국가에 사는 우리에게도 영감을 준다. 우리도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며 (친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고무적이게도, 2월 27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50만 명 규모의 반전 시위가 벌어져, 러시아의 침공도 규탄하고 독일의 재무장 시도에도 반대했다. 영국의 전쟁저지연합도 러시아와 나토의 군사 행동 모두를 반대하며 3월 6일 국제 공동행동의 날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투쟁들이 성장·발전해 궁극적으로는 제국주의 경쟁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3면으로 이어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주의가 전쟁의 진정한 원인이다

“이윤과 부를 향한 미친 경쟁을 벌이며 두 거대한 제국주의 열강은 끔찍한 핵전쟁의 고통으로 세계 문명의 존립과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노동계급과 인류의 이해관계는 어느 한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데 있지 않다. 둘 모두와 맞서는 데 있다. 오늘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의 전투 구호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닌 국제 사회주의.’”

토니 클리프는 1950년 11월 《소셜리스트 리뷰》 첫 호에 실린 글 ‘열강의 다름’을 위와 같이 끝맺었다. 당시 클리프는 조그만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를 막 설립한 상황이었다. 이 단체가 오늘날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SWP)과 세계 곳곳에 생긴 자매 단체들인 국제사회주의경향(IST)으로 발전한다. 당시 클리프의 글은 1950~1953년의 한국 전쟁을 다루는 글이었다. 이 전쟁에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중국,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소련의 스탈린주의 체제와 대결했다.

당시 클리프는 이미 국가자본주의론을 발전시켜 놓았다. 클리프는 소련이 사회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서구에서 득세하고 있던 자본주의 체제의 한 변형에 불과함을 논증했다. 소련의 집권 공산당을 지배하는 세력은 국가 통제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했다. 소련은 제2차세계대전 말에 점령한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한 제국주의 국가라고 클리프는 ‘열강의 다름’에서 썼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이 벌인 냉전은 제국주의 사이의 갈등이었다. “지구의 재분할을 둘러싼 투쟁”이었다. 20세기 전반부에 독일과 영국이 벌인 전쟁처럼 말이다. 그래서 클리프는 이런 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반전 집회와 행진

호로 글을 마무리한 것이다.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닌 국제사회주의.”

이 “전투 구호”는 냉전 시기에 우리의 길잡이가 됐다. 그 덕분에 우리는 1991년 소련이 붕괴했을 때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다. 소련의 붕괴는 국가자본주의 강대국의 몰락임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클리프가 제시한 구호는 오늘날 우리 상황에도 놀랍도록 잘 들어맞는다. 실로 오늘날의 세계는 “두 제국주의 열강이 끔찍한 핵전쟁의 고통으로 세계 문명의 존립과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세계다.

시험대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러시아는 옛 소련에 비해 훨씬 약한 강대국이다. 서방이 금융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에너지와 함께 러시아의 또 다른 주요 자산인 핵 전력의 경계 태세 강화를 선언하는 것으로 대응했

다. 오늘날 미국에 대한 진정한 도전자는 중국이다.

한편, 어떻게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클리프는 위대한 러시아 혁명가인 블라디미르 레닌의 평전을 썼다. 레닌은 1914년 8월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제국주의 상호간 전쟁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동시에 진정한 혁명가를 가리는 시험대는 그런 전쟁에서 자국 지배자들에 일관되게 맞서느냐 여부라고도 했다.

레닌은 적성국을 규탄하는 데 집중한 사회주의자들을 경멸했다. 러시아의 전제정을 비난하는 독일 사회주의자들, 프러시아의 군국주의에 침침 준엄한 분노를 표하는 영국과 프랑스 사회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레닌의 경멸 대상이었다. 레닌은 전쟁이 발발하자 처음부터 자국 정부에 반대한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프크네히트를 찬양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면한 지금 우리는 당연히 러시아 제국주의와 그들이 벌인 무자비한 침공을 규탄해야 한다. 러시아군의 즉각 철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서방에서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랴. 그러나 그런 요구를 제기하는 용감한 러시아인들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우리가 미국 제국주의의 가장 충직하고 호전적인 동맹인 영국에 사는 사회주의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지금의 재앙을 낳는 데 일조했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러시아가 취약해졌을 때 러시아 국경 쪽으로 나토를 진출시키고 친서방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에게 서방에 합류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겨서 푸틴의 불만과 피해망상에 부채질을 했다. 많은 사람이 전쟁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할수록 제국주의 체제 자체에 맞선 운동을 더 크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 번역 이원웅

▶ 2면에서 이어짐

군비 증강이 평화를 보장할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비 증강을 부추기는 논리에 이용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은 “힘을 통한 평화” 운운하며 군비 증강을 적극 선동한다. 최근에는 한국이 미

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재인도 2월 28일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연설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는데, 이는 우파가 선동하는 군비 증강을 자신이 이미 추진하고 있음

을 부각한 것이다.

이미 군비 증강의 조짐이 비치고 있다. 미중 갈등의 쟁점이 돼 있는 대만에서 최근 예비군의 무장 강화와 대전차 실전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그 한 사례다. 대만

정부는 1300억 원 규모의 미사일 수입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 한국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정세를 더 긴장케 할 군비 증강 물이에 반대해야 한다.

차악次惡도 악惡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

표 찍기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 정치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패퇴시키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좌파 성향 청년들과 사회운동가들은 적지 않다. 후자의 사례로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 성 주류화 전략을 여전히 지지하는 한국여성단체 연합과 소속단체 활동가들, 얼마 전 이재명 캠프에 들어간 박지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운동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윤석열이 진정한 개혁과 정의의 염원을 하는 청년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입증되기를 바란다.

그들의 심정은 완전히 이해할 만하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반드시 비판이 동반되어야 하고 투표 행위에 국한하는 것이어야 한다(이를 두고 '비판적 투표' 전술이라고 함).

이하에서는 당의 성격 때문에 (투표 행위를 넘어) 민주당을 활용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부르주아(거리낌 없이 자본주의적) 정당

좌파 운동의 연장으로서 또는 좌파 운동의 고양을 위해 민주당원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다수 민주당원은 '사람을 생각하는' 강령을 가진 정당이 공천한 '사람을 생각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사람을 생각하는' 개혁 입법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친자본주의적 개혁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선거를 통한 집권과 급진적 대중 운동이 양립하기 어렵다고 믿는다(숨기지 않는 반자본주의적 선전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선거를 통한 변화가 급진적 대중 운동의 대안이라고 믿는다.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과 그것의 조직에 뒤따르는 다양한 위험 부담을 피하면서 제도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서 선거를 택하는 것이다.

대중 운동의 부침과 민주당의 실세 변동 사이의 관계를 거꾸로 보는(그럼으로써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의존하는) 온건 개혁주의자들이 많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중 운동이 고양될 때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떠올랐고, 대중 운동이 쇠퇴할 때는 그 존재가 두드러지지 못했다.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다 민주당 정치를 지지하는 것은 대중의 의식과 행동을 녹슬게 한다

이 점은 1997년 말 '외환 위기'로 급격히 고양된 노동자 저항에 힘입은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 2002년 말 40만 청년 촛불 시위에 힘입은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 2004년 봄 우파의 노무현 탄핵에 항의한 시위에 힘입은 노무현의 총선 압승,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에 힘입은 이듬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등을 돌이켜봐도 금세 명백해질 것이다.

한편, 결국 민주당은 급진적 대중 운동을 우회하고 결국 견제하는 구실을 해 왔음도 알 수 있다. 예컨대 1987년 7~8월 노동자 대파업 당시 김대중과 김영삼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그 운동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제하라"고 "권고"했고,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자기네 당사에 찾아가자 박대와 모멸로 응답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최선의 길이 급진적 대중 운동이나 유권자의 사상 변화를 꾀하지 않고 그저 유권자의 기존 견해를 반영함으로써 그들을 투표함으로 유인해, 자기네에게 표를 찍도록 하는 것임을 잘 안다.

그러기에 민주당 정치인들은 (옛 독재 정권의 잔당 정치인들처럼) 선거 공약 뜯어고치는 조변석개를 식은 죽 먹기처럼 한다.

이런 때,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지지

하는 사회운동가들은 민주당 후보(가령 이재명)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대중의 조건이 개선될 것처럼 대중에게 말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요인들 때문에, 민주당을 사회운동에 이롭게 '활용'하려는 온건 개혁주의자들은 심각한 장애에 부딪히고 만다. 활용하기보다는 활용당한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애초 급진성을 누그러뜨리고 점진적 방식을 택하는 결과에 봉착하게 된다.

민주당 정치와 피억압 대중 운동

선거로 민주당 정부를 세워 사회 개혁을 이루겠다는 온건 개혁주의자들은 민주당(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정당) 정치와 피억압 대중 운동의 본질적 차이를 알아야 한다.

대중 운동에서는 사람 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당 정치에는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도록 하는 것과 다수표를 얻는 것이다.(물론 자금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 숫자 문제다.)

그러므로 민주당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어려움을 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기존 의식에 자기들의 정

강과 공약을 적응시키는 것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안다. 추수주의는 불가피한 방도가 된다.

그가 우파라면 그는 좌측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가 좌파라면 그는 우측으로 이동해야 한다. 중간 부동표 획득이 최대 관건이 된다.(윤석열과 이재명의 결합 양상을 보라.)

선거에서의 승리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당선되지 못하면 말짱 황일 테니까 말이다.

사회운동가가 이런 선거주의 논리에 말려들면 목적과 수단이 전도돼, 급진적 사회 비판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할 테니까 말이다.

똑같은 논리로 민주당 정치의 지지자들도 좌파적 후보에게 별로 공감하지 못한다. 그들은 민주당을 '활용'하고자 하는 좌파적 인사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매려 한다.

그러므로 좌파 성향 사회운동가가 민주당 정치와 선거 운동을 지지하면 아무리 자기 만에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하려 해도 불가능할 테니, 치명적인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정치를 지지하는 것은 대중의 의식과 행동을 녹슬게 함으로써 사회운동의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대중 자신의 집단 행동이 아니라 선

대중에게 진짜로
새겨 주어야 할 것은
“현실 운동의 한 스텝,
한 스텝이 한 묶음의 강령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거가 대중의 조건 개선과 사회 개혁에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생각과, 대중 자
신이 아니라 민주당이 개혁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유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당 정치가 사회운동의
일환인 양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거
나, 민주당의 공약이 진보적 공약이라
도 되는 양 착각하게 만들고 만다.

민주당 정치를 지지하는 사회운동가
들 가운데는 민주당 지지와 자신들에 대
한 지지를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
다.(특히, 자칭 페미니스트 문재인 등장
이후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이 그랬다.)

대중은 그런 동일시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의 배신에 환멸
을 느낀 대중의 상당수가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대중 운동과 민주당 정치는 대중이 힘
을 증대시키고 조직을 건설하며 의식을
높이는 데 미치는 효과 면에서도 크게
다르다. 대중 운동에서 대중은 법과 종
종 충돌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법의 계
급적 성격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또, 종종 불가피하게 경찰과 충돌해야
하고, 따라서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이
해하기 시작한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한편, 운동에 참가하는 대중은 다른
부분의 대중으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
아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대중 운동은 진정한 역량을
창출하는 과정이 될 수 있고, 또한 지속
적 조직화를 낳을 잠재력과 참가자의
의식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 정치는 이와 정반대 효
과를 낸다. 그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아
무와도 맞서게 하지 않으며, 대중의 삶
이 걸려 있는 일상적 저항을 수행할 조
직의 성장을 가져오지도 않는다. 그것은
아무의 세계관도 바꾸어 놓지 않으며 아
무의 삶에도 충격을 주지 않는다.

민주당 정치는 대중의 조직화나 의식
또는 진정한 역량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계급투쟁을 통해서는 지배
계급의 사상적 지배에서 어느 정도 벗
어나고 지배적 관념을 다소 떨쳐버릴
수 있지만, 금권과 허위 의식이 난무하
는 민주당 정치를 통해서는 그런 생각
과 관념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맺음말

위에서 우리는 민주당을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과, 대중 운동과
민주당 정치의 본질적 차이에 대해 살
펴봤다. 민주당 지지 전략은 이를 이해
하지 못해, 스스로가 애초에 목적인 바,
곧 민주당 정부를 통한 개혁을 성취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민주당과의 동맹(포퓰리즘 전
략)은 계급을 초월한 전략인데, 지배계
급 내부의 경쟁이 노동계급 사람들의
상호 관계 속으로 흔히 내면화되므로,
노동계급 내 분열이 확대·심화된다.

그러면, 지배계급의 노동계급 이간/
각개격파 전략을 돌파할 능력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싸움 자신이 없는 분위기가 사회운동
속에서 번져나갈 것이고, 싸움 자신이
없어지면 사기가 저하된다.

그러면, 지배자들의 이간질 각개격파
전술들을 패퇴시킬 효과적인 저항을 펼
치기가 쉽지 않아질 것이다.

일종의 악순환이다. 이것이 문재인
집권 하에서 사회운동 측에 일어난 일
이다.

선거 참여를 이용해 그럴듯한 강령을
선전함으로써 이런 꼬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중에게 진짜로 새겨 주어야 할 것
은 마르크스가 브라케에게 보낸 편지
(1875년 5월 5일)에서 강조한 바, 곧
“현실 운동의 한 스텝, 한 스텝이 한 묶
음의 강령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대중 스스로가 조직하고 집단 행동에
나섬으로써 그 그럴 듯한 강령의 내용
을 쟁취하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역량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져 나아가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일어난 노동
운동을 개혁주의적 지도부들이 조합주
의적(부문주의와 경제주의) 한계 안에
가둬 놓는 바람에 미발전된 대중의 정
치 의식을 제고할 유일한 출발점이다.

이주노동자 숙소 — 얼어 죽거나 화재로 죽거나

2월 22일 새벽 파주시 외곽의 한
식품 공장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숙
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도 국적의
A씨(46세)가 사망했다.

서툰 한국말로 살려 달라고 외치
는 소리를 듣고 옆 공장에서 달려
온 사람이 구출을 시도했으나 역부
족이었다. 무슨 이유인지 출입문은
열리지 않았고 창문은 쇠창살로 막
혀 있었다. 불은 20~30분 만에 진
압됐지만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A씨는 인도적 체류 허가(G-1비
자)를 받아 한국에 3년째 거주 중이
었다고 한다. 인도에 배우자와 6세
딸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23일 새벽에는 김포시의 공장 컨
테이너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주노동자 수십 명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반복되는 비극

이주노동자가 사는 컨테이너 숙
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은 겨울
마다 반복되고 있다. 사용자들이 비
용을 아끼려고 열악한 숙소를 제공
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이주노동자들
의 숙소는 흔히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임시 가건물이라 화재에
취약하다. 게다가 냉난방과 소방 시
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적
지 않다. 그래서 추위를 막으려고 전
기장판 등 전열기를 과도하게 사용하
다 화재가 나고, 소방 시설이 없어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2020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
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용
자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는 이
주노동자 545명 중 11.2퍼센트가
소화기·스프링클러 등 화재 대비
시설이 없다고 응답했다. 6퍼센트
는 냉난방 시설이 없었다.

2018년 고용허가제 외 체류 자격
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일부 포함
한 실태 조사에서는 화재 대비 시설
이 없다는 응답이 약 35퍼센트로 더
높았다.(최저보다 낮은 - 2018 이
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 조사)

〈경인일보〉 보도를 보면, A씨의
숙소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화
재 대비 시설이 없었다고 한다. 심
지어 화장실도 없었다.

정부는 땀질 처방만

2020년 12월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 속행 씨가 한파 속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의 열악한 숙소 문제가 사회적 주목
을 받았다. 그러자 정부는 몇 가지
대책을 내놨다.

우선 숙소 기준을 일부 강화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 기준에 미달하
는 숙소를 제공하면 고용허가를 취
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제공하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고
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이런
대책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선, 이 대책은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속행 씨
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였기 때
문에 딱 그에 한정된 대책만 내놔던
것이다. A씨와 같은 인도적 체류 허
가자, 현재 전체 이주민의 20퍼센트
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민, 난민 신
청자 등은 적용받지 못한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인 경우에
조차 한계가 많다. 사용자가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제공해도 정부가 바
로 제재하지 않는다. 새로 고용계약
을 맺을 때에야 해당 사용자에게 고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한다. 즉, 계
약 중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숙
소를 바로 개선하지 않아도 크게 불이
익이 없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로 항
공편이 급감해 신규 이주노동자 유입
이 줄면서 이런 제재로 숙소가 개선되
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주노동자가 숙소 문제
로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숙소가 기
준 미달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야 한다. 한국의 법, 제도, 언어에 익
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사각지대 속에서 A씨가 화
재로 사망하는 비극이 또 벌어진 것
이다.

정부는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시설을 저렴
하게 제공하도록 보다 실질적인 조
치를 취해야 한다.

임준형

외국인보호소 확진자 급증

일시 석방했다가 다시 구금하겠다는 정부

화성외국인보호소 당국이 일부 구금자를 한 달 기한으로 석방하고 있다. 구금된 이주민의 코로나 감염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뒤늦은 조처다. 감염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주민들을 감염시킨 셈이다.

2월 4일 화성보호소에서 이주민 1명과 직원 2명이 확진됐다. 그 후 확진자가 급증해 감염된 사람은 2월 11일 이주민만 20명을 넘었고, 2월 22일 이주민 49명과 직원 19명에 이르렀다. 150~200명으로 추정되는 구금 인원 에 비해 보면, 이주민 3~4명 중 1명이 확진된 것이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이 접촉하고 있는 구금 이주민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보호소 당국의 이러한 대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보호소 당국은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5일이 지난 2월 9일부터 밀접 접촉자 일부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으로 이송·격리하고, 또 다른 일부는 일시 석방하기 시작한 듯 하다.

그러나 확산은 지속됐다. 급기야 2월 15일에 확진된 한 이주민은 증세가 심각했는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시설로 이송된 밀접 접촉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곳에 함께 이송됐던 한 이주민은 열흘간 단식을 벌여 석방됐다고 한다.

보호소 당국은 그제서야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이주민들까지 일부 석방한 것으로 보인다. 2월 24일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2월 18일까지 38명을 석방했고 추가 석방 계획도 있다고 한다.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모든 인원을 석방했다면 감염이 이토록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보다 통제를 우선하는 보호소 당국의 태도와 정부의 방역 완화가 결합돼 큰 피해를 낳았다.



김민준



전시 행정 말고 완전 석방을 지난해 12월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시찰하는 법무부 장관 박범계

사진: 최정민

석방하면서도 통제 유지

보호소 당국은 이주민들을 일시 석방하면서도 통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보호일시해제' 형식이라 석방된 이주민은 미등록 체류자 신분인 유지된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자기 이름으로 휴대폰도 개통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석방 기한이 한 달에 지나지 않는다. 설령 현재의 보호소 내 감염이 가라앉더라도,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면 집단감염이 반복될 것이 뻔한데 말이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

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특히 난민들이 장기 구금되곤 한다.

신체를 구금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치소·교도소와 기본 구조가 본질적으로 같다. 밀폐된 곳에서 단체 생활이 이뤄지기 때문에 쉽게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확진자들을 지하실에 모아 놓고 방역복을 입은 직원이 식사를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확진자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입원 치료

하고 나머지는 "재택치료"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국인보호소의 실정에 적용한 셈이다. 이들 중 누군가가 중증으로 악화됐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된다.

한 달 후 이런 위험한 곳에 제 발로 돌아가야 하는 이주민의 심정은 끔찍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화성보호소 당국은 생활치료센터나 다른 시설로 이송됐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중 치료와 격리기간이 끝난 일부를 이미 화성보호소로 돌려보내고 있다.

구금의 부당함 자인한 꼴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구금된 이주민을 석방하라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단칼에 거부해 왔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수용된 인원이 정원의 60퍼센트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확진자 급증 사태는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도 감염을 전혀 막을 수 없었음을 보여 준다. 게다가 보호소 당국은 이제 극구 꺼리던 일시 석방으로 밀집도를 낮추고 있다.

그동안 보호소 당국은 구금된 이주민이 기저 질환, 난민 심사·소송 준비, 체불 임금 문제 처리 등을 위해 일시 석방을 요구해도 거부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화성보호소는 새우깡이 고문을 당한 피해자를 사건이 폭로된 뒤에도 무려 5개월이나 더 구금했다.

그런데 보호소 당국은 이번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는 대거 석방하고 있다. 석방의 조건으로 요구하던 보증인과 보증금조차 없이 말이다.

구금된 이주민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또는 전쟁과 박해를 피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체류기간을 넘겼을 뿐이다. 정부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거나 혹은 일자리와 복지를 빼앗는

다며 내국인 노동자와 이간질하는 데 이용했다. 또 이런 논리를 이용해 야만적 단속추방과 이를 위한 외국인보호소 구금을 정당화해 왔다.

그런데 '마중' 활동가에 따르면, 보호소 당국은 단순히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구금하던 사람들을 우선 석방하고 있다고 한다. 체류기간만 넘겨도 중범죄 취급하던 조처가 부당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일시 석방된 이주민들을 완전히 석방하고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남아 있는 구금 이주민도 무조건 즉각 석방해야 한다. 장기 구금으로 거처가 마땅치 않은 경우 적절한 거주지도 마련해 줘야 한다.

임준형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민주당의 중재는 노동조합에 양보 압력을 넣는 것이다

전국택배노조가 2월 28일에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당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합의 정신 준수와 불신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데 따른 조치다.

2월 28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소속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CJ대한통운 본사 앞 파업 농성장을 방문했다.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63일 만이다.

이에 맞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에 참가했던 주체들이 상호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다.

민주당의 중재는 주로 노동조합에 양보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제안문 첫 문장에서 “택배 노조 파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택배 사회적 합의 정신의 준수를 요청”했다.

또한 민주당은 CJ대한통운 사측에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길” 바란다는 말만 한 반면, 택배노조에게는 “파업 사태를 끝내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마치 노조 파업이 합의를 위태롭게 만든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대놓고 “파업을 풀어 주시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CJ대한통운 사용자의 약속 파기는 못 본 척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제안문을 보면, 파업이 장기화된 이유가 노사 간 상호 불신과 양보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완전 헛소리다.

노동자들이 생활비 대출까지 받으며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이는 것은 CJ대한통운 사측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분류 작업 인력 충원과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등)를 이행하지 않아서다.

더구나 사측은 대놓고 합의 파기도 추진 중이다.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내용(당일 배송, 주 6일제 근무,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의 부속합의서 채택을 강행하려 한다.

정부도 무책임하게 합의 이행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여 주기 식 현장 조사를 하고는,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등이 소속된 CJ택배 공대위는 노동자들을 응원하면서도, 부적절하게도 양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사측의 사회적 합의 이행이 “양호”하다는 결과를 발표해 사측을 편들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제안문에는 사회적 합의의 주요 주체인 민주당 자신은 물론이고 사측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집권당 정치인들로서의 자기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매우 뒤늦게 민주당이 사회적 대화를 소집하고 나선 것은 대선이 코앞까지 온 상황에서 택배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일 것이다.

대선에서 이재명이 열세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택배 파업을 원만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줘, 사용자들에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려 하는 것이다.

한편, 택배노조와 CJ택배공대위(이



2월 21일 전국택배노동자대회

하 공대위)가 이런 민주당의 제안에 환영 입장을 낸 것은 아쉽다.

노조는 민주당의 대화 제안과 “전향적인 노력 촉구”에 대한 화답으로 본사 1층 점거 농성을 풀었다(파업은 지속한다).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며 2월 21일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해제한 지 1주일 만이다. 공대위는 이번에도 노조에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제적 행보”를 요청했다.

지난 1주일간 택배노조가 선제 양보를 거듭하며 대리점연합회와 대화를 했지만, 사측은 오히려 더한층의 양보를 요구했다.

노조가 ‘부속합의서 즉각 철회’ 입장에서 ‘파업 복귀 후 논의’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쟁의행위 일체 중단’과 ‘대체 배송 허용’을 조건으로 달았다.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고, 쟁의 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노조는 거부했다). 딱 하나를 내주니 아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꼴이다.

또한 사측은 파업 기간에 해고한 노동자 80명에 대한 해고 통보 철회도 하지 않고 있다. 민·형사상 고발 철회 요구도 거절했다.

경찰도 점거 농성과 관련해 25명에게 2월 28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를 작성 중인 3월 1일 현재, CJ

대한통운 원청은 민주당의 대화 제안에 답이 없다. 원청은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선 때까지 계속 버티려 할 수 있다. 대리점연합회는 파업부터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제안한 대화가 언제 열릴지, 무엇보다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나올지 보장은 없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은 심각한 생계 부담 속에서도 두 달 넘게 파업을 지속(19일간의 본사 점거 농성 포함)하며 상당한 전투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에 비해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등의 투쟁 연대는 매우 미흡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등이 공대위 소속 단체인데, 공대위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면서도 부적절하게도 양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를 수용한 택배노조 지도부의 결정도 아쉽다.

대화 재개를 위한 거듭된 양보는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사기 유지에 좋지 않다.

대화의 성패는 대화장 밖 노동자들의 투쟁과 투지에 달려 있다. 민주노총 등 주요 노동운동 조직의 연대가 중요하다.

신정환

우크라이나 — 전쟁과 억압의 역사

우크라이나는 제국주의 열강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며 억압해 온 역사로 점철돼 있다. 이제는 러시아가 침공해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 **이샤벨 링로즈와 유리 프라사드**가 우크라이나 분쟁의 역사를 살펴본다.

수백 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거기 사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은 제정 러시아 하에서 심하게 억압받았다. 제정 러시아는 1720년부터 소수 언어 공동체를 없애고 러시아어를 강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볼셰비키는 러시아 제국을 분쇄하고 억압받는 민족의 자결권을 옹호했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에 뒤이은 내전 때문에, 볼셰비키는 자신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917년 혁명을 전복하고 러시아를 침공한 제국주의 자들과 손잡은 우크라이나의 잔인한 반동 세력들 때문에 더욱 그랬다. 우크라이나 내에 분열이 심각했다.

우크라이나 동부는 대부분 산업화된 지역으로, 인구 다수가 노동계급이었다. 이 노동계급은 볼셰비키에 친화적 이었고 러시아어를 구사했다. 서부는 농촌 지역으로, 농민과 혁명에 회의적인 계급들이 다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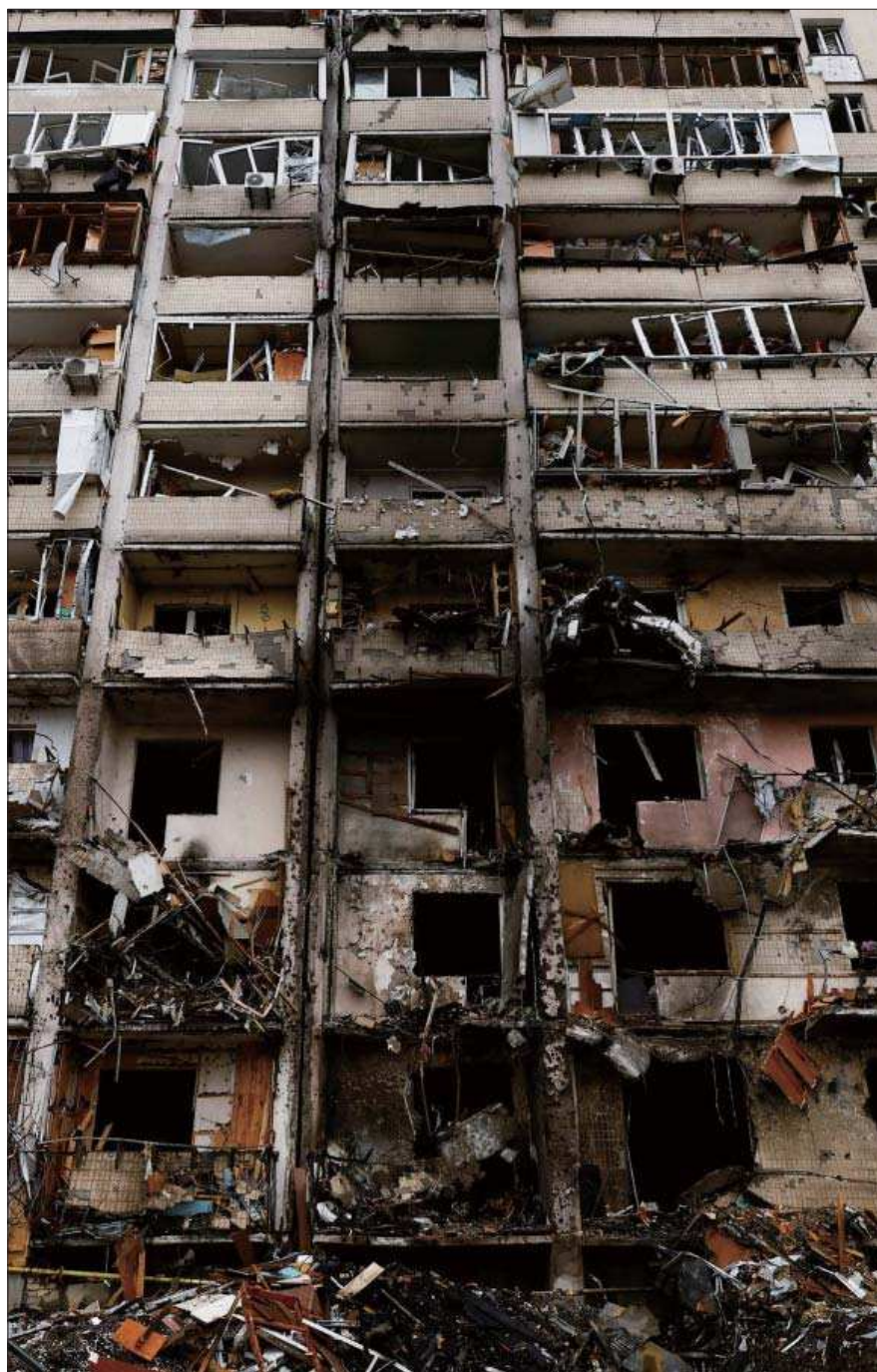
1917년 [러시아에서] 2월 혁명이 벌어지자, 중간계급 출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라다' 정부를 세웠다. 라다 정부는 10월 혁명 후 수립된 소비에트 정부와 볼셰비키를 인정하지 않

았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노동자 정부를 건설하리라 기대할 수 없었던 볼셰비키는 친제국주의적 라다 정부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으로 개입했다. 1918년 1월, 우크라이나 출신인 레온 트로츠키가 이끄는 적군(赤軍)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소비에트'를 선포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에서 언어·교육에 관한 몇몇 중요한 권리들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독립 공화국이 될지 소련의 일부가 될지에 관한 논쟁이 계속됐다. 라다 정부는 독일의 지원을 기대했다. 1918년 3월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이 체결됐고, 러시아는 제1차세계대전에서 발을 뺐다.

그러나 이 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 영토의 넓은 부분이 독일 차지가 됐다. 독일이 제1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독일 점령지에서 대규모 저항이 일어나자, 라다 정부는 통제력을 일부라도 되찾으려 애썼다. 폴란드와 반(反)볼셰비키 단체들이 라다 정부를 지지했다. 반혁명 세력인 백군의 편에 선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적군에 대한 지지가 늘었는데, 학살을 거듭 겪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히 그랬다.

1919년 봄이 되자 적군이 다시 키예프를 점령했고 백군 지도자들은 밀려났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21년에 폴란드가 제국을 확장하려고 전쟁을 다시 일으켜, 우크라이나의 많은 부분을 떼어 갔다.



비극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째인 2월 25일 수도 키예프의 한 아파트 건물이 포격으로 파괴돼 있다

스탈린, 러시아 국수주의를 되살리다

일찍이 1918년에 스탈린(사진)은 레닌에 반대하며 “자결권 지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자결권은] 사회주의 원칙보다 하위의 것이다” 하고 주장했다. 스탈린의 반혁명으로 만들어진 소련하에서 우크라이나의 역할은 러시아에 이은 “제2의 소비에트 공화국”이 되는 것이었다.

소련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통일 국가 건설에 몰두했다. 다른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국가자본주의적 경쟁의 일환이었다. 그러면서 소련은 볼셰비키가 철폐했던 억압을 상당 부분 부활시켰다. 1920년대 후반이 되면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진보적 조치들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됐다. 트로츠키는 1939년에 망

명지에서 이렇게 썼다. “우크라이나 서부 대중에게는 크렘린[소련 정부]에 대한 지지와 호의가 흔적도 남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서부, 부코비나 지방, [우크라이나 동부의] 카르파토-우크라이나의 노동자·농민 대중은 혼란에 빠져 있다. 누구에 기대야 하는가?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 트로츠키는 반동적 지도자들이 이런 혼란을 이용해 “독립이라는 허상을 약속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인들을 이런저런 제국주의 세력들에게 팔아넘겼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농경지는 소련을 먹여 살리는 데에 동원됐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돈바스 지방의 대규모 석탄·철 매장지에는 공업 단지가 세워졌다.



스탈린 정권은 서구 열강과 경쟁하기 위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발전을 우선 추구했다. 그 대가는 사람의 목숨으로 치렀다. 1932~1933년 기근과 농민

탄압으로 약 390만 명(추산)이 목숨을 잃었다. 집단화 정책에 따라 개인 소유 농장들이 국영 집단 농장으로 대체되면서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났다.

저항은 체포·살해로 이어졌다. 농민들은 할당량을 충족할 때까지 곡물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굶주림이 위협 수단으로 이용됐다. 1932년까지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성은 목표치를 60퍼센트밖에 채울 수 없었다. 1940~1953년 소련 내무부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의 다른 지역으로 57만 1000명이 추방됐다. 제2차세계대전 전후 기근 때문에 1946~1947년 사이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또 다른 점령에 반대한다

푸틴이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의 분리 독립이 러시아 헌법에 부합한다고 선언하고 러시아군을 파병한 것은 우크라이나 국가를 분열·약화시키려는 시도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남부에서 “러시아계”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을 파병해 분리주의 세력들을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가 개입한 진짜 이유가 아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점령국”[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옛 소련 출신 나라들]이라 부르는 나라들을 계속 통제하기 위해 대군을 이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 사용자들은 실제로 국가의 차별을 받고 있다. 2015년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어가 국가의 유일한 공식 언어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공식 제2외국어로 사용하게 허용하는 법률을 폐지했다.

루한스크·도네츠크 지방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러시아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 지역 주민의 3분의 2는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여긴다.

러시아어 사용 제약은 반동적 행위일 뿐, 인도적 행위가 전혀 아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를 모두 사용한다. 헝가리어·루마니아어·폴란드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인들도 적잖다. 푸틴의 접근법은 우크라이나가 언어적인, 또 이른바 민족적인 경계에 따라 분리돼야 함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대부분은 이를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베를린에 있는 ‘동유럽 및 국제 연구센터’가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루한스크·도네츠크가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에 속해 자치권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은 주민 중 약 3분의 1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약 20퍼센트는 분할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는 대개의 다른 나라들보다 심한 인구 강제 이동을 거처며 형성된 국가다.

2015년 이래로 우크라이나는 국내 실향민 인구가 많기로 10위 안에 드는데, 실향민 수가 180만 명에 이른다. 또 난민 100만 명 이상이 러시아로 피난해야 했다. 우크라이나를 조각내는 제국주의 갈등이 계속되면 불행만 더해질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크〉 번역 박이랑

※ 온라인 기사에는 우크라이나 역사(1917~2022)를 한 눈에 보는 연표가 실려 있습니다.

소련 붕괴와 위기의 새 물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 역시 위기에 빠질 것은 뻔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앞으로 서구에 존재한다 믿었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생활수준도 향상되리라고 기대했다. 이들은 장차 냉전이 종식되면 우크라이나가 더는 잠재적 핵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품었다.

1990년에 학생 시위대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도시 광장들을 점거했다. 국가가 학생들을 위협하자 수많은 노동자들이 행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들의 요구 상당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1991년 8월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이는 [소련에] 치명타였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농업 생산, 방

위 산업, 제조업들 상당 부분의 기반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거슬러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인정했다. 옐친은 동구권 붕괴와 고르바초프 사임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옐친의 바람대로 됐다.

하지만 옐친은 급한 나머지 크림반도와 흑해 함대의 항방 문제를 간과했다. 그러나 흑해의 제해권은 양국 지배계급에게 군사적·경제적으로 사활적인 것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지배자들은 함대 일부를 신생 우크라이나 해군에 편입시키려 했다. 그러나 흑해 함대 장교들의 압도 다수는 러시아 충성파였다.

동시에 크림반도 전역과 중요한 항구인 세바스토폴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해, 흑해 함대

의 수병을 끌어들이려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급조된 협약을 맺어 함대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지만, 갈등과 긴장 고조 위협은 오늘날까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경제 위기가 우크라이나를 덮쳤다. 1993년 이래로 신자유주의적 충격 요법이 우크라이나를 강타했다. 생활 수준이 파탄에 이르렀다. 평생 모은 저축이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1990년에 거리로 나섰던 사람들이 품었던 희망은, 빈곤의 새 시대와 내전의 위협으로 산산조각났다. 설상가상으로,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은 실패한 체제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반동적 민족주의를 퍼트렸다. 이 전략의 끔찍한 대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와 부패

우크라이나 경제의 붕괴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더 빨라졌다. 이것이 다음 반란의 배경이 됐다. 2013년 말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2개월 치밖에 남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는 채무 불이행 위기에 놓였다.

우크라이나의 통치자들은 이제 현금이 절실해졌다. 최후의 순간에 당시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유럽연합(EU)과의 협정 체결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이면 합의에 기댔다. 야누코비치는 대개 푸틴의 추종자로 여겨지지만, 서방과 동침하던 인물이었다. 야누코비치는 2004년 “오렌지 혁명”으로 이미 한 차례 대통령 자리를 잃었지만, 2010년 선거 부정으로 점철된 과정 끝에 “재선”됐다.

야누코비치의 행동은 ‘마이단’ 시위를 촉발했다. ‘마이단’은 시위대가 점령한 키예프 중앙 광장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운동은 비교적 작았고, 그 기반

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과 거리를 좁히길 바라는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부패를 낳은 스탈린주의와 연결 지었다.

야누코비치가 일명 ‘베르쿠트’라는 특수 부대를 투입해 시위 유형 진압을 명령한 후, 시위는 훨씬 더 커지고 정치적으로 다양해졌다.

운동에 새로 참가한 사람들 다수는 부패와 국가 폭력을 규탄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러시아 중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지에는 비교적 불명확했다. 이 운동을 주도하려 애쓰던 친서방 정치인들은, 나토 군사 동맹 및 유럽 연합과의 협상 지지 여론이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다수라고 재빨리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동부·남부의 러시아어 사용자들에게는 우크라이나 문화에 반하는 “식민주의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극우 단체들이

급성장했다. 그리고 민족주의를 분열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로는 푸틴 역시 자신의 적들과 마찬가지로였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본질적으로 러시아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마이단 운동에 밀린 야누코비치는 2014년 2월에 러시아로 도피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제복을 입었지만 소속을 밝히지는 않은 군인들이 크림반도 의회를 점거하고 크림반도를 분할 점령했다. 그 후 우크라이나에게서 크림반도가 독립할지를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됐는데, 전체 투표자의 9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크림반도는 푸틴에 의해 병합됐다. 같은 해 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에서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들이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전쟁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1만 4000명이 사망했다.

‘이대남’과 페미니즘 논쟁

지난해 재보궐 선거 이후 20대 남성이 안티 페미니즘 성향이라는 주장이 유행하고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안티 페미니즘을 선거에 적극 활용하고, 20대 청년들의 윤석열 지지가 높아지자 청년 남성들의 안티 페미니즘에 주목하는 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 ‘나는 고발한다’ 칼럼에서 청년 남성들의 안티 페미니즘 문제를 놓고 다양한 필자가 논쟁을 벌였다. 2월 14일자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글(“정의당의 페미니즘은 실패했다, 류호정도 그렇다”)이 실렸고, 박가분 작가(정의당 당원)가 반론을 펼쳤다. 2월 16일자에는 박가분의 글(“이대남에 엉뚱한 좌표 찍은 여... 그들의 표 계산 완전 잘못됐다”)이 실렸고, 신지혜 씨가 이를 비판했다(이하 모든 존칭 생략).

페미니즘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관점은 달라도, 20대 남성의 다수가 안티 페미니즘이라는 가정은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 청년 남성 중 페미니즘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두고 청년층의 다수가 안티 페미니즘 성향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흔한데, 정확하지 않다. 페미니즘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모두 성평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종숙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논문(2020)을 보면, 20대 남성의 성 평등 의식은 20대 여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세대·성별보다 높은 편이었다.

사람들의 의식은 흔히 모순돼 있으므로, 이분법적 결론을 내는 연구는 주의해야 한다. ‘안티 페미니즘’을 느슨하게 사용할 게 아니라, 성평등에 반대하며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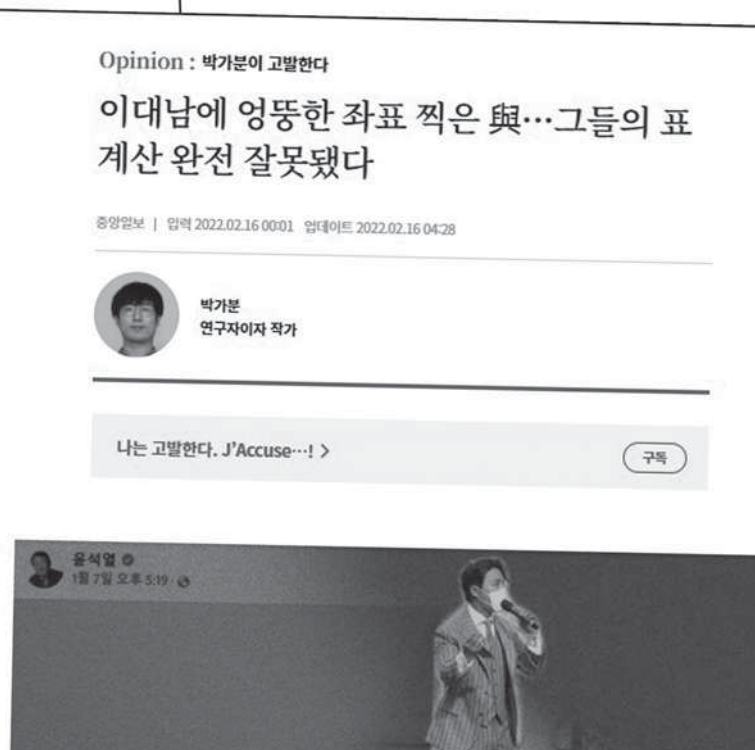
일면적

‘이대남 신드롬’은 분명 과장돼 있다. 하지만 청년 남성 사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을 신지혜처럼 단지 남성 우월주의 집단들에 의해 “기획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류호정은 우파의 페미니즘 백래시에 환호를 보내는 청년 남성들의 안티 페미니즘에 개탄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로 위마드와 “엘리트 여성운동가들의 실책”을 꼽는다. 정의당의 문제점은 좋은 정책을 잘 알리지 못한 것, 페미니즘을 쉽게 설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청년 남성들의 안티 페미니즘을 놓고 벌인 논쟁



물론 페미니즘은 하나가 아니고 위마드가 페미니즘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맞다. 위마드처럼 남성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분리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운동의 주류가 아니다.

그러나 평범한 청년 남성들이 반발하는 급진 페미니즘은 단지 분리주의 페미니즘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분리주의 페미니즘은 급진 페미니즘의 극단적 경향이다). 남성 일반을 권력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로 보며 남 대 여 대립 구도를 설정하는 급진 페미니즘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여성단체들에서도 수용돼 왔고, 좌파의 다수도 그렇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중도진보 언론이 남성 일반을 잠재적 성범죄자, 성차별주의자로 취급하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대거 실었다.



이런 점에서 박가분이 페미니즘이 성별 대립을 부추겨 왔다고 지적한 것은 일리가 있다. 20대 남성들을 극우, 일베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옳다.

그런데 박가분 역시 일면적이다. 특히, 페미니즘의 약점만 보고, 20대 남성들의 의식을 단일한 것(안티 페미니즘)으로 취급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 남성의 지지율 하락을 정부의 친페미니즘 기조 때문이라고 보고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사고의 혼란을 보인다. 또한 2018년 불법촬영물 항의 시위가 성차별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이었다는 점을 무시한다.

개혁 배신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친페미니즘 미사여구나 일부 정책에 일부 청년 남성들이 반발했어도, 청년 남성 다수가 현 정부에 등을 돌린 핵심적인 이유를 페미니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그런 주장은 사실 개혁이 과해서 문재인 인기가 떨어졌다는 우파의 터무니없는 비난에 문을 열어 준다.

실제로는 20대 남녀의 정부 지지율이 (양적인 차이는 있어도) 비슷하게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대 남녀 모

두 정부 지지가 매우 높았다. 문재인이 페미니즘 언사를 가장 많이 하고 내각에 여성을 30퍼센트 할당한 것은 정부 초반이었다.

2020년 4월 총선 때도 민주당 지지율은 2017년 대선에 비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증가했다(당시 민주당은 우파 야당이 팬데믹 초기에 노골적인 반(反)서민성을 드러낸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한편, 지난해 민주당이 참패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2030 청년 남녀 모두에서 지지가 하락했다.

청년층의 문재인 지지 하락은 불평등이 개선되며 삶이 나아지기를 바란 청년들의 변화 염원을 문재인 정부가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핵심 원인이다.

정부는 자신의 개혁 배신을 정당화하기에 바빴고, 이를 위해 청년을 성별로 이간질했다. 정부의 지지 하락은 정부 탓이 아니고 이대남의 안티 페미니즘과 젠더 갈등 탓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젠더 갈등의 주된 책임조차 문재인 정부와 이를 노골적으로 이용하려는 우파 정치 세력에 있다.

이보다는 책임이 훨씬 덜하지만, 급진 페미니즘의 과도함은 상당수 청년 남성들의 반발을 낳으며 젠더 갈등이 부각되는 데 일조했다.



2022년 1월 24일 MBC '100분 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의당의 페미니즘은 어떤가?

류호정은 위마드를 비판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들어간 "엘리트 여성운동가들의 실책"도 지적한다. 그것은 "박원순·오거돈 성폭력 사건" 방관,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한 신조어" 사용,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 옹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의 "여혐"을 감싼 것 등이다.

말하자면, 민주당의 페미니스트들이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인 것이 페미니즘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2020년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실이 문제됐을 때 민주당의 페미니스트 의원들(남인순, 김상희)이 주류 양당간 진영 논리로 이를 변호한 것은 청년층의 분노를 샀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윤미향 비판에는 위안부 문제 미해결 현실에 대한 개탄도 있었는데, 당시 민주당은 윤미향에 대한 비판을 모두 우파적·친일적인 공격인 양 싸잡았다.

한편, 류호정이 박원순 사건에서 민주당의 페미니스트 의원들(남인순, 김상희, 진선미 등)이 "피해호소인" 용어를 쓴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용어는 "해괴한 신조어"가 아니라, 여성운동 일각에서 급진 페미니즘의 주관주의적 성폭력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수 년 전부터 사용돼 왔다. 류호정 자신도 박원순 사망 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020년 7월 13일).

피해자 중심주의

7월 16일 우파 변호사 김재련(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 인권증진국장을 지냈다)이 민주당과 서울시가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를 "2차가해"라고 비난하자, 상당수 페미니스트들(그 전에 이 용어를 사용한 사람들도 포함해)이 김재련의 주장에 동조했다.

박원순의 사망으로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 해당 여성 편을 들지 않았다고 '2차가해'로 비난하는 것은 확증편향일 뿐이다.

당시 민주당의 페미니스트 남인순 의원이 보인 진짜 문제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것이었다. 남인순에게 정보를 준 게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상임대표로 드러나 김영순은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여연은 대중의 불신을 사게 됐다.

김재련 등 우파가 민주당을 공격하고자 급진 페미니즘의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개념을 활용하자 여성단체들은 혼란에 빠졌다. 진상을 알 수 없어도 무조건 피해 호소 여성 편에 서야 한다는 주장을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수용해 왔기에, 이 사건은 우파에게 유리하게 이용됐다.

정체성 정치의 논리에 따라 박원순 사건에서 심지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김재련과 제후해 활동했는데, 신지예도 그중 하나다. 윤석열 캠프 합류는 좌절됐지만 신지예는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

류호정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므로 이 문제로 인한 여성운동의 혼란에서 교훈을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엄밀한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합리적 문제 제기를 가로막아 왔고, 이것은 여러 피해를 낳고 여러 운동 내에서 수많은 분열을 야기해 왔다.

개혁 입법 전략

류호정은 민주당으로 간 몇몇 "엘리트 여성운동가들의 실책"을 협소하게 지적할 뿐,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다.

여성운동 지도자 출신 정치인들이 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에 들어갔지만, 노동계급 등 서민층 여성의 조건은 별 개선이 없었다. 문재인은 내각에 30퍼센트 여성 할당으로 주류화 지향 여성운동가들의 환심을 샀지만, 노동계급 등 서민층 여성을 위한 개혁은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류호정은 여성운동의 주류가 공공연한 친자본주의 정당인 민주당과 동맹하는 전략을 취해 온 것을 비판하지 않는

추천 영상



젠더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

정진희
<노동자 연대> 기자



<https://youtu.be/J3T8ToFMDoc>

다. 정의당이 한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삼가며 드러내놓고 협력했고, 정의당의 페미니즘도 페미니스트들의 공식 진출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한다는 '성 주류화' 전략을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정의당의 페미니즘은 이데올로기 면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페미니즘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고, 실천 면에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의당은 사회운동과 정치를 예리하게 분리시키는 입장을 취하며 기층에서 운동을 건설하는 데 나서지 않는다. 정치는 입법 활동이나 선거 대응 수준으로 협소해진다.

정의당 의원들이 의회 연단이나 언론을 통해 차별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며 몇몇 개혁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성별 대립에 반대하며 진정으로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정당을 표방한다면, 기층에서 급진적이며 노동계급 남녀가 단결하는 폭넓은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2016년 폴란드에서 낙태권 시위('검은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난 데는 여성들의 높은 자발성과 함께, 좌파 정당 라젠프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아쉽게도 정의당은 한국의 낙태권 운동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성평등한 사회는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참가하는 대중운동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성별 이간질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 청년과 노년의 사람들이 공통의 적에 맞서 단결하는 것이다. 이 말은 차별에 맞서는 투쟁이 계급투쟁과 분리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뜻이다.

정진희

인플레이션 — 많이 풀린 돈이나 임금 상승이 원인 아니다

이정구

지난 2월 24일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미국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마도 “거리에 피가 흐를 때” 투자하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이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식 시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3월에 있을 금리 인상을 더 우려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3월에 금리를 대폭(0.5퍼센트포인트)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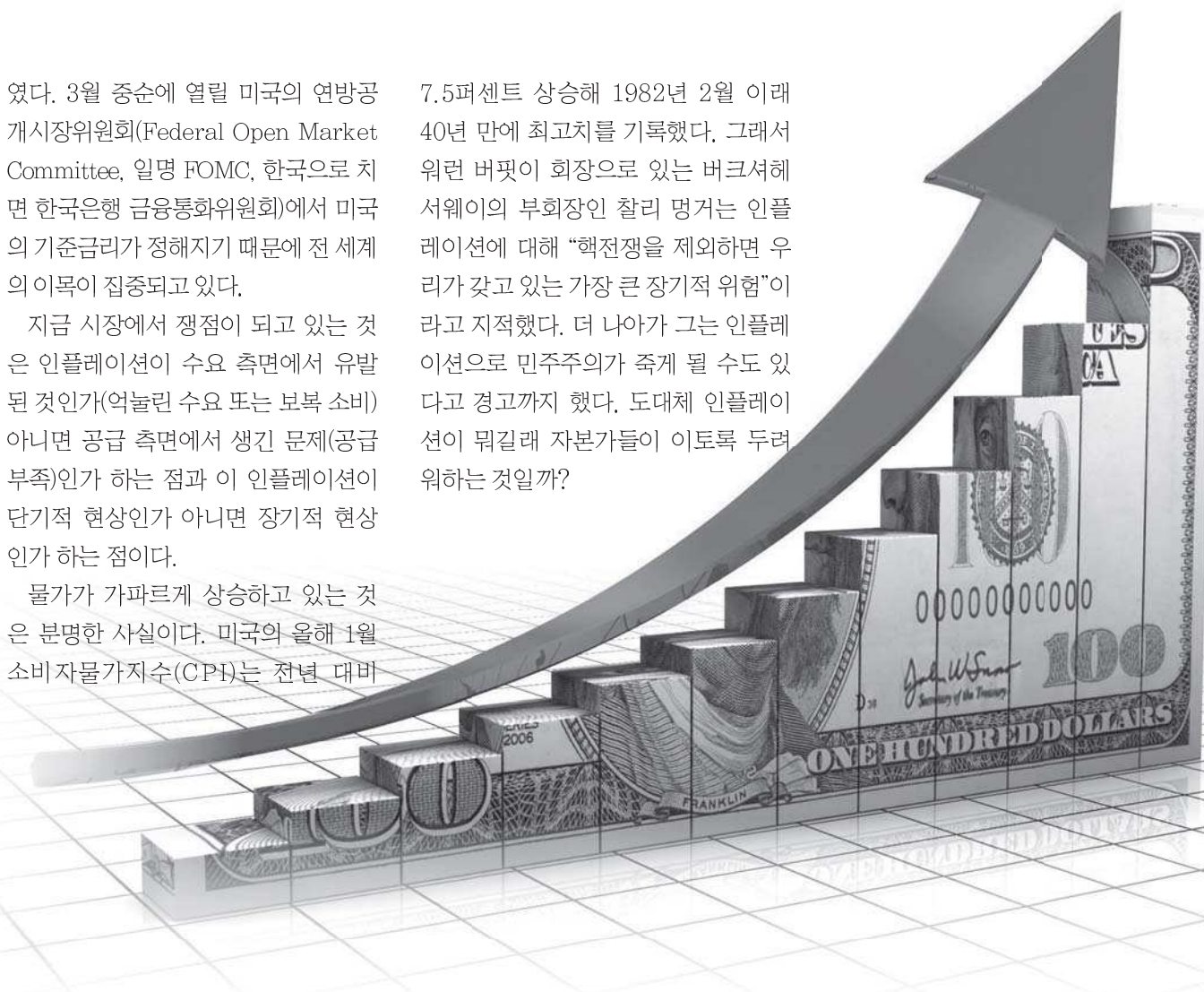
최근 몇 달 동안 자본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지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이하 연준)가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였다. 3월 중순에 열릴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일명 FOMC,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수요 측면에서 유발된 것인가(억눌린 수요 또는 보복 소비) 아니면 공급 측면에서 생긴 문제(공급 부족)인가 하는 점과 이 인플레이션이 단기적 현상인가 아니면 장기적 현상인가 하는 점이다.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국의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7.5퍼센트 상승해 1982년 2월 이래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해서웨이의 부회장인 찰리 멩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핵전쟁을 제외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기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인플레이션으로 민주주의가 죽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뭐길래 자본가들이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



수요 문제인가, 공급 문제인가?

앞에서 제시한 질문에 답변을 해 보자. 인플레이션이 수요 측면에서 유발된 것인가 아니면 공급 측면에서 생긴 문제인가? 정답은 공급 측면에서 생긴 문제다. 이것을 마르크스주의의 노동가치론에 기초해 설명하면 이렇다.

인플레이와 노동가치론

생산물 가치는 불변자본의 가치(C)와 가변자본의 가치(V) 그리고 잉여가치(S)의 합이다. 예를 들어 불변자본이 80원, 가변자본이 20원 그리고 잉여가치가 20원이라면(편의상 원이라는 화폐로 표현했다) 이 생산물의 가치는 120원이 된다. 이것이 시장에 나와 수요와 공급 요인 등에 의해 130원에 팔릴 수도 있고, 110원에 팔릴 수도 있다. 이때 생산물의 가치(120원)는 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여기서는 시간을 화폐로 표현한 것이다)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노동가치론에 기초한다면 가치는 수요 측면에서 결정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치가 120원인 생산물이 시장에 적게 출하돼 240원에 팔리더라도 그 생산물

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시간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는 공급 측면에서 결정되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 등의 요인에 의해 그 가치를 중심으로 오르내린다.

노동가치론에 기초해 최근의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면, 보복 소비나 억눌린 소비처럼 수요의 급작스런 상승 때문이 아니라 공급 차질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공급 차질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해결되면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원자재 공급 비용이 이전보다 많이 들고, 물류 비용도 증가하며, 노동력 공급에도 이전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종 원자재나 노동력의 생산에 드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의 증대(이것은 가치의 증가를 나타낸다) 외에도 수요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공급 부족 때문에 생긴 가격의 급등(가치의 증가를 나타내지 않는다)도 존재한다. 많은 기업들이 공급 부족 상황에서 가격을 가치보다 높게 인상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신규 투자를 하려는 자본가

와 최종 소비자에게로 전가된다.(신규로 투자하려는 자본가는 노동력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기대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담을 최종 생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예상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 부합한다.

기업의 팬데믹 대응이 낳은 공급 차질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의 최고경영자 쇠렌 스키투는 “현재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문제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선적 컨테이너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운송비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부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업종은 자동차다. 자동차 뉴스매체인 AFS에 따르면, 2022년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빚는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108만 대에 이를 것이고 이는 올해 1월의 예측치에 비해 2월에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많은 기업들이 수요 감소를 예상하여 생산을 줄였

다.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적시생산(Just-in-time) 체계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을 지속하면서 공급망의 차질은 점점 더 심해졌다. 따라서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하고 이전과 같은 생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므로(사실이 아니라 기대다) 하반기에는 인플레이도 잠잠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상하려는 것은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최악의 처방이 될 수 있다. 인플레이의 원인은 공급 부족 때문인데, 미 연준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종종 제기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를 더욱 침체하게 만들 것이다. 실물 경제의 이윤율이 낮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부실 기업들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 또한 부채가 많은 가계들도 고통에 빠질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기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씩 올리면서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많은 이들의 고통스런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화폐적 현상?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로 여기는 통화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은 1963년에 이렇게 말했다. “인플레이션은 어디에서나 항상 화폐적 현상이다.” 프리드먼처럼 통화 공급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어떤 재화가 많아지면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듯이, 화폐도 많이 공급되면 그 화폐의 가치도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화폐수량설이라고 한다. (화폐수량설에 대한 쉬운 설명은 본지의 ‘인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봐야 할까?’(2021년 6월 9일치) 기사를 참고하시오.)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에 관해서는 어빙 피셔가 제시한 화폐방정식 $PT = MV$ 이 유명하다. 여기서 P는 물가수준, T는 상품 거래량, M은 통화량, V는 화폐의 유통속도를 의미한다. 어떤 재화가 팔린다면 그 재화의 가격만큼 화폐가 움직이기 때문에 화폐방정식은 항상 항등식이다. 하지만 이 항등식에서 논쟁이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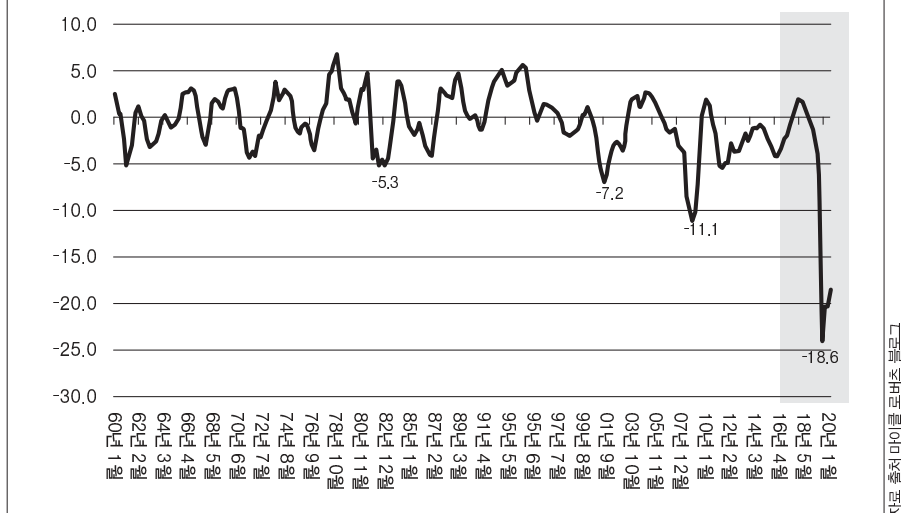
것은 M이 증가하면 P가 상승하는가 하는 문제와 이 방정식에서 독립변수(주요적인 요소)가 어느 쪽인가 하는 점이다.

통화주의자들은 경제는 항상 완전고용이 이뤄지고 국내총생산이 잠재적 역량의 최대치를 보여 주기 때문에 경기 부양 같은 통화량 증가 조처들은 국내총생산을 늘리지는 못하고 다만 물가 상승만 초래한다고 본다. 그래서 통화량(M)을 늘리면 상품 거래량(T)은 늘지 않고 물가수준(P)만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오판하고 있는 것은 화폐의 유통속도(V)가 일정하다는 가정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의 조사(표1)를 보면, 2020년 6월경 화폐의 유통속도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20년 초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많은 돈들이 시장에 풀렸지만 산업생산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시중에 풀린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바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의 잔고로 들어갔고, 이 돈

표1) 미국에서 광의의 통화(M2)의 유통속도



광의의 통화(M2)는 시중에 풀린 현금 유통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들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아 화폐의 유통속도가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화폐가 산업 생산에서 빠져나와 유통되지 않는 현상을 ‘화폐의 축장’이라고 불렀다.

우익 이데올로그들은 시중에 풀린 자금 중 일부가 노동자들에게로 갔고 그래서 재난지원금 등으로 노동자들의 저축이 많아졌으며 그 결과 노동자들

은 일을 하기보다는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자신들의 저축을 늘렸을 법한 쪽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고소득자와 은퇴한 부자들이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저소득 노동자와 실업자 그리고 일시 해고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동안에 이전의 저축을 까먹으며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억제된 수요가 원인?

통화주의자들이 통화량 증대를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한 반면, 주류 케인스주의자들은 ‘과도한 수요’를 인플레이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은 인플레이 기대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임금과 물가의 나선형 구조를 막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타이트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를 유발시켰다는 증거는 없다(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주장은 늘 존재해 왔다. 마르크스는 《임금, 가격, 이윤》에서 이런 주장을 낱알이 반박했다. 최근의 논의로는 본지 ‘최저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낳나?’(2018년 2월 7일치)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 코로나19 이전 20년 동안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2퍼센트 증가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0.4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자본가들의 이윤 증가가 국내총생산

증가보다 더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억눌린 수요’ 또는 ‘보복 소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자본가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소비는 대체로 개인적 소비가 아니라 생산적 소비, 즉 투자다.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의 과열이 진행되고 있다면 금리를 인상해 이를 억제하는 게 물가를 떨어트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예상 수익률, 즉 이윤율은 결코 높지 않다. 이처럼 실물경제의 활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불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연준 의장 폴 볼커는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0퍼센트까지 인상했고, 그 결과 1980~1982년의 심각한 경기 후퇴를 초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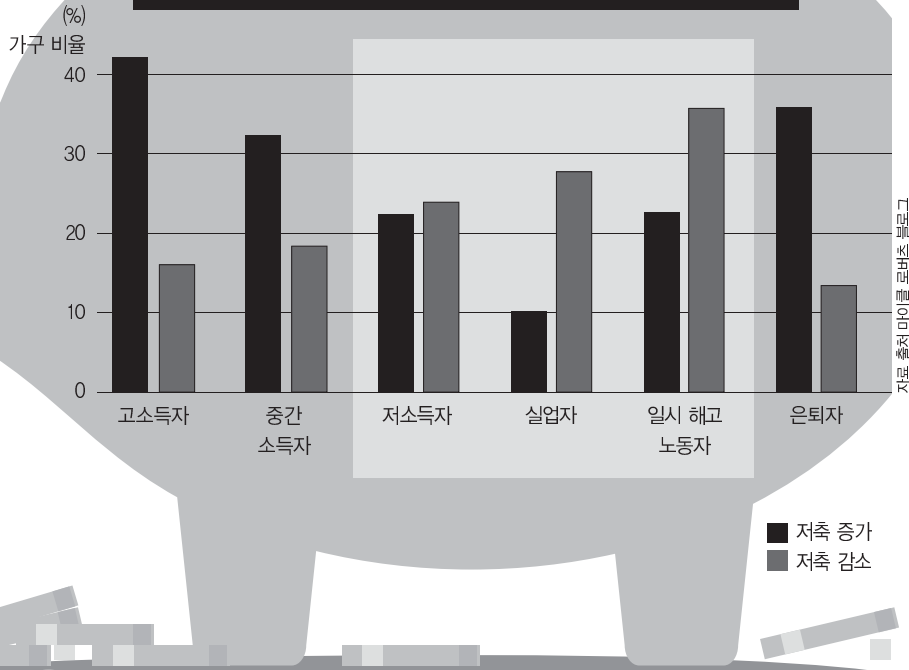
미국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얼마만큼 올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에 대한 논의는 그릇된 진단과 실패한 처방이 될 공산이 크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신호탄이 돼 각국 중앙은행들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신흥국 시장에 투자된 달러의 선진국 환류 등으로 취약한 신흥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들, 그리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주택 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서민들에게는 기준금리 인상은 고통스런 정책이 될 것이다.

표2) 코로나19 동안 미국 가계의 집단별 저축 추이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

고 한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 2021년 2월 27일 개정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workers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online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_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하세요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팬데믹, 기후 위기, 차별과 해방, 좌파의 대안 논의 등 주제별 영상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읽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시사/이슈 토크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과 논쟁점,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공수처 통신조치 논란, N번방 방지법 ...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하는 [주말 pick] /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독자편지

ws@wspaper.org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대체 이번 달 내 이자가 왜 올랐냐”는 항의성 전화들

저는 케이뱅크라는 인터넷은행의 도급사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입니다. 최근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케이뱅크는 예적금 상품의 경우, 금리가 제일 높은 상품조차 (그것도 은행이 만들어 놓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 이율이 겨우 1.5~2.0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반면 대출 이자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정부가 정한 고정금리)에 개별 고객마다 평가등급별 가산 금리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못해도 4퍼센트부터 시작하고, 신용 등급이 낮으면 5~6퍼센트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은행을 주거래로 삼으면 우대 금리라는 명목으로 0.5퍼센트 정도 대출 이자를 차감해 줬는데, 그나마도 지난해부터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합니다. 당장 이번 달에 내야 하는 이자만으로도 허덕이게 됩니다.

제가 대출 담당 부서는 아니어서 정확한 수치는 내지 못하지만, 담당 부서의 동료 노동자들에 따르면 가장 많이 걸려 오는 전화가 “대체 이번 달 내 이자가 왜 올랐냐”는 항의성 전화라고 합니다.

합법적 날강도

그러나 아무리 문의를 해도 결국 고객들은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합니다. 고객에 대한 은행의 구체적 평가는 “대고객 안내 금지” 즉, 영업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자 는 무조건 내도록 하면서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으니 합법적인 날강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케이뱅크만이 아니라 시중은행 모두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를 걸 수밖에 없는 처지의 고객들은 대부분 분류상 ‘직장인’이거

나, 소득으로 보건대 영세한 자영업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금리 인상이 정확하게 서민 보호가 아니라 은행의 보호라는 점도 보여 줍니다.

동시에 진정한 문제는 애초에 금리를 올리는 정부와 은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물가 인상에 대응한다며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금리 인상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한국도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여 년 만에 4퍼센트대에 진입할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심각한 물가 인상과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의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연대> 신문이 꾸준히 지적한 대로 현재의 경제 위기에 노동자와 서민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물가 인상은 1차적으로 공급 차질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상품 생산의 공급에 대한 통제권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통제권도 없습니다.

실질임금은 하락하는데, 물가와 금리만 오르니 이중의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도 올해 기본급을 고작 5만 원 올렸습니다. 물가 상승에 비하면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은 셈입니다.

금리 인상은 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는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관련 직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평등을 말하지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한계라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회가 본질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자본주의에 맞서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며 투쟁을 전진시켜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박한솔 은행 콜센터 노동자

청년희망적금이라더니

지난주 청년희망적금 신청 폭주로 여러 은행 앱들이 마비됐다.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혜택과 정부의 저축장려금 등을 포함해 약 10퍼센트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2년간 매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약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 한 주만 200만 명이 이 적금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부가 애초 준비한 예산은 고작 38만 명뿐이었다. 청년들의 불만이 일자 정부 는 올해 연말까지였던 가입 기간을 3월 4일로 단축하며 기간 내 가입한 청년들에게 모두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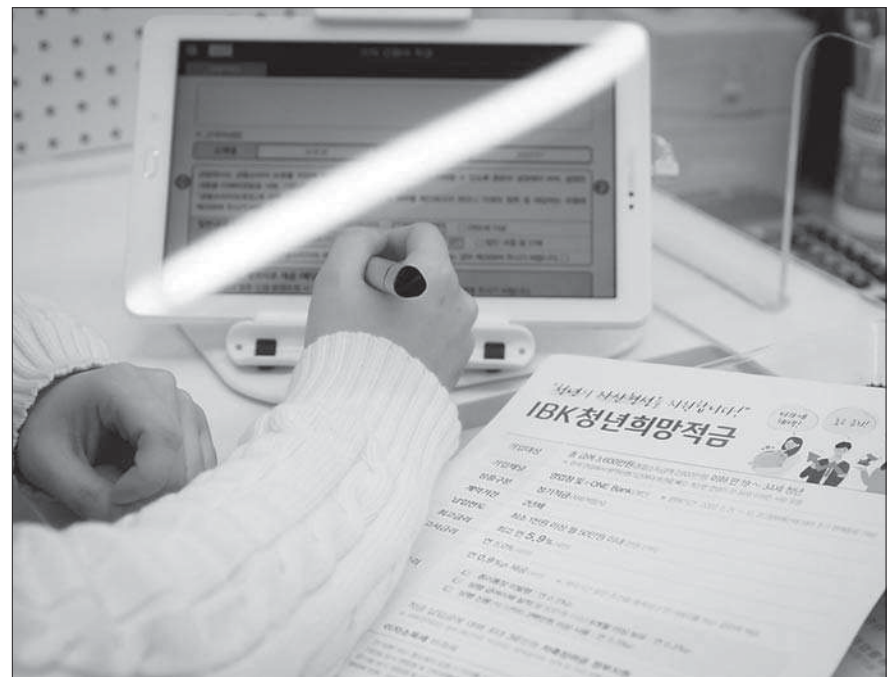
가입 대상도 논란이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만든 상품이라고 광고했지만, 소득이 아예 없는 청년들은 배제됐다.

또, 가입하려면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4대보험 등을 제하고 계산해 보면 월급 265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월 273만 원이다. 평균 수준의 임금만 받아도 대상에서 탈락한다.

‘연 10퍼센트 이자 효과’라며 큰 혜택인 양하지만, 사실 2년간 꼬박 월 50만 원을 납입해도 손에 쥐는 돈은 월 4만 원 정도로 용돈벌이 수준도 못 된다. 적은 월급으로 월세, 생활비, 공과금, 교통비 등을 부담하면서 매월 50만 원을 저축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말이다.

이처럼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조건도 까다롭고 충분한 지원도 못 되는 생색내기 수준의 복지다. 쥐꼬리만한 지원금에도 가입 신청자가 몰리는 것은 한국 청년들의 빈곤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5.5퍼센트가 은행 등에 부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주거비 마련(38퍼센트), 생활비 마련(26.1퍼센트), 학자금 마련(19.8퍼센트) 등이 그 이유였다. 한국 청년 빈곤층의 빈곤 탈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30.7퍼센트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대폭 오른 생활 물가는 생활비 중 식비



생색내기 복지 까다로운 가입 조건, 쥐꼬리만한 지원금. 이게 무슨 ‘청년 희망’?

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에게 더한층의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되는 게 불만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년들의 현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내가 낸 세금을 외국인이 가져간다’는 이간질도 먹힐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고통은 이주민 탓이 아니다. 이간질에 반대하며 정부가 기업 지원

보다 복지에 더 투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더욱 타격을 입으면서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 심각해졌다.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월세, 치솟는 물가, 정부가 예고한 공과금 인상까지 청년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양선경 20대 청년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을까?

3월 17일(목) 오후 8시

발제 최미진

〈노동자 연대〉 기자,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공저자

오늘날 여성의 처지는 양극단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여성 차별을 단지 옛일로 치부하고, 다른 한편에선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수십 년간 여성의 삶과 지위는 얼마나 어떻게 변화했고, 여성 차별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여성의 처지는 계급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런 변화가 여성 해방 운동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 **참가신청** bit.ly/0317-meeting

▶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